

지난해 우유급식 초·중·고생수 1.8% 증가

지난해 학교에서 우유를 급식한 초·중·고생 수가 전년보다 1.8%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초·중·고교생의 우유 급식률이 전년보다 0.7%증가한 50.5%이며 초·중·고별로는 각각 76.8%, 27.6%, 1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유급식 학생수는 전년 대비 1.8%증가한 393만 8000명이며, 이중 유상급식은 352만명, 무상급식은 41만 8000명으로 원유량은 1일 788톤, 연간 약 14만 8000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학교우유급식이 지난해 원유생산량 218만 8000톤의 6.8%, 백색시유 소비량 136만 2000톤의 10.9%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유급식률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5년에 중학교, 2006년 고등학교까지 학교우유 무상급식사업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중학교는 4%, 고등학교는 3.1% 증가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대도시지역 학생들이 대도시외 지역학생보다 우유를 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도시지역 우유급식률은 35.1%인데 비해 대도시외지역은 63.3%로 집계됐다.

국내 검역대기 미국산 쇠고기 5300여톤, 고시 후 이르면 3일내 풀릴듯

검역대기 중인 미산 쇠고기가 수입고시 후 이르면 3일내에 풀릴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이번에 풀리는 쇠고기는 지난 10월 '미산쇠고기 전면 수입금지조치'로 용인과 부산 등지에 검역대기 중인 5300여 톤이다.

검역원측은 잔류물질검사 일부 물량을 제외하면 수입고시 후 검역신청, 역학조사, 관능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3~5일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무작위로 추출해 수입정

보자동화시스템(AIS)을 통해 항생제나 호르몬 등 잔류물질 검사를 하는 물량은 검역기간이 14일 가량 걸리겠지만 관능검사만 마친 물량은 약 3~5일만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며 "용인 등지에 있는 2000여 톤은 6월 첫째주 주말에는 밥상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역원측은 국민우려를 감안, 검사밀도를 높이기 위해 관능검사의 개봉검사율은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서 광우병 발생 땀 '수입중단'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양국 통상 장관이 서한으로 명문화했다.

또 수입위생조건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척추의 횡돌기,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성(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월 20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5~19일까지 미국 수산 스와브 미무역대표와 버쉬바우 주한 미대사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 추가 협의를 갖고 서한 교환 형태의 이같은 내용의 보완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GATT 20조와 WTO동식물검역협정(SPS협정)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서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SRM의 정의가 차이가 나는 점과 관련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미국 규정을 적용,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에 이같은 규정을 위반

●● 농축산소식

했을시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23조(해당 쇠고기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와 24조(2회 위반시 검역 중단)에 의거,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논란이 돼 왔던 30개월령 이상 소 수입금지와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 위해물질을 제거하면 교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며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이전보다 강화된 조치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경남 사천)은 이에 대해 “정부가 검역주권을 명문화했다하지만 결국 추가 합의 내용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이 위협에 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검역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라며 “30개월 이상 소 수입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둔 굴욕적인 협의이다”고 논평했다.

쇠고기 소비 ‘한파’, 축산농가 ‘한숨’

쇠고기 소비위축여파로 소 경락가격이 연일 하락, 축산농가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한우 kg당 지육가격은 지난 달 4월 21일 1만3302원에서 22일 1만3189원, 23일 1만2560원, 26일 1만2052원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26일이 월요일로 통상 약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주 1만3338원보다 크게 떨어진 것. 27일 소폭 반등, 육우의 경우 kg당 6000원선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전체 쇠고기 거래값은 전순평균치에 못미쳤다.

이같은 약세는 출하물량 증가보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이 전체 쇠고기 소비위축으로 번진 결과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하락폭은 소비위축 현상이 두드러진 수도권외의 경우

더 컸으며, 꾸준한 소비층이 있는 한우 고급육 보다 한우 2등급 이하와 육우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다.

대형마트의 매출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측은 “수입 국산 구분 없이 매출이 줄었다”며 “미산 쇠고기 취급계획은 고려할 수 없는 단계이며 매출의 기본이 되는 한우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중도매인의 경우 경매 중 주문취소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 낙농체험목장 5곳 추가인증, 총 12곳

낙농진흥회는 올해 신규 낙농체험목장 5곳을 추가 인증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경기 6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남 1개소, 울산 1개소, 제주 1개소 등 총 12곳이 체험목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새로 인증된 체험목장은 경기도 진주목장(대표 박응규), 와우목장(대표 위철연), 아트팜(포천낙농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설목장(대표 한경), 제주도 농원목장(대표 이성철), 경기지역의 농도원목장, 모산목장, 진주목장, 와우목장, 아트팜은 지난해부터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밀크스쿨 지원사업’ 대상목장이기도 하다.

체험목장 중 은아목장, 파도목장, 설목장, 농원목장 등 4개 목장은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낙농체험관광사업’을 겸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낙농체험 시작 5년 만에 소비자 관심에 힘입어 체험목장이 전국 운영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체험시설 등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작되면서 이의 내실제고와 확대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조성된 체계를 바탕으로 낙농체험을 학교우유급식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등 우

유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며 향후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흥회는 또 "소비자에게 쾌적한 체험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목장여건을 갖추고 우유소비홍보 최전방에 서겠다는 마음을 가진 낙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다만 낙농체험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생각하기보다 낙농산업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시키는 교육·홍보프로그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소강상태

40일 이상 전국을 들쭉거리던 A가 2주 동안 추가 발병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A 대책이 확산 방지에서 조기종식과 소비촉진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현재 68건 신고에 양성 42건, 발생 33건으로 변동 없이 12일 이후 추가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부는 A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 종식과 가금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A 후속대책으로 종계·종오리 폐기 및 종란 폐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에 이를 통보하고 종계·종오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단가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이번 A 사태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함께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축종별 중장기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위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수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5월 26일 현재 경계지역에서 209만4천수, 일반지역에서 197만9천수 등 총 507만3천수의 수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소비촉진을 위해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TV 및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배너광고를 통해 국내산 가금류의 안전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 '그림의 떡', 현실반영 못 해 생색내기용 그쳐

정부의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책이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5월 14일 2008년도 제 3차 회의를 연 가운데 참석한 협의회 위원 조합장들은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관련, 농가의 신용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홍병천 중앙회이사(홍천축협조합장)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양돈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한도가 현실과 달라 1억원을 받기도 힘들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축협이 바람막이를 하면서 창구마다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는 또 "구매미수금을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그나마 일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상옥 도협의회장(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도 "신용등급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농협과 축협조합간 등급 차이가 실제 3등급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산 시스템 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양돈농가는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대출금리 3%, 1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특별지원하는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원 중 자금 배정은 현재 2400여 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용 1등급 농가도 전체에서 1~2%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라이브뉴스)